

길 잃은 민주주의를 바로 잡다.

글 · 이은진 ejlee@kyungnam.ac.kr

역사의 흐름을 들여다보면, 묻혀있던 과거의 사건이 떠오르고, 다시 미래의 길이 새로이 개척되는 것을 볼 수 있다. 1960년 4월 19일 학생의거에 의해 사실상 이승만 정부가 물러나게 된 이후의 상황은 조금 지체되었기는 하지만, 실은 이전에 결정되었다고도 볼 수 있다. 이미 외신과 국내의 신문들은 3월 15일 정부통령 부정선거와 이에 따른 민심의 이반을 강력하게 지적하고 있었고, 반면에 이에 대처하는 이승만 정부의 야만성과 탄압성을 인지하고 그 변화의 추이를 주목하고 있었다.

3월 15일 이후에도 경찰은 한때 큰소리를 치면서 공산 5열의 사주에 의해 폭동이 발생했다고 우겼으나, 곧이어 수세에 몰리고 총격을 가한 경찰을 체포하고 수사하는 사태로 까지 나가게 된다. 이어 경찰이 무너지고 계엄군이 들어선 이후에도 군대는 이미 이승만의 통제에 의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꼭두각시 같은 친위세력은 아니었다. 미국은 끊임없이 지지철회의 신호를 보냈지만, 4월 19일 이후에는 국무성, 한국주둔 유엔군 사령관, 그리고 주한 미국대사가 이승만에게 직접 면담을 통해 의견을 표명하고, 이승만 이후의 전략을 진행시키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럴수록 이승만의 친위세력들은 권력을 놓치지 않으려고 더욱 과격한 정책을 취하기도 했고, 불

안한 미래를 예견하고 서서히 이승만과 거리를 두려는 경향도 나타나게 된다. 정권의 몰락은 대개 외부의 위협에 의해 내부의 분열과 자기 파멸로 나타나는 게 상례인 것 같다.

이승만이 물러나고, 허정과도정부에 의한 권력 공백기는 세금 징수능력과 국가 공권력의 와해를 촉진했다. 5~6월에는 이러한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이미 이승만 정부 몰락 이전에도 재정적자로 공무원들의 급여가 제대로 지급되지 못했다. 별선의 루트를 통해 선거용 자금을 제공하면서, 국가의 공무원들은 더욱더 부정선거에 관여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승만 정부가 몰락한 후의 상황은 더욱 심했다. 외부에서는 민중들이 부정선거 관련 자라고 공무원들을 불신하는 데다가, 어느 누구하나 제대로 이를 집행하려는 의지도 실력도 갖지 못했다. 심지어는 계엄령하의 헌병이나 경찰도 민중들의 민주적 욕구에 대해서는 지나칠 만큼 관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과거에 해결되지 못한 미완의 과제를 해결하는 일이 우선적으로 떠올랐다. 혁신세력의 응집과 정치적 등장, 한국전쟁기 양민학살 피해자의 등장, 교원노조를 비롯한 각종 집단적으로 응집된 목소리의 등장이다. **길을 잃은 민주주의를 정상궤도에 올려놓으려는 시도가 본격화된**



이승만의 80회 생일을 기념하여 만든 남산의 이승만 동상이 망명 후 철거되고 있는 모습, 1960년 8월 사진제공 경향신문

것이다. 사회적 뿌리를 더 캐본다면, 일제의 퇴각 이후에 청산하지 못한 일제의 잔재가 있다. 이승만 정부의 부정 선거 획책, 민중의 시위에 대한 탄압의 아이디어와 그 실행을 담당하는 이들은 한결같이 일제시대 일본제국을 위해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 투쟁하던 인사들을 탄압한 경력을 갖고 있기에 그렇다. 일제의 청산하지 못한 유산 위에 이승만 정부는 유지되고 있었던 것이다.

혁명의 경과는 어디이건 마찬가지지만, 그리 단순하지 않다. 자유당의 잔재들은 쉽게 물러나지 않았다. **혁명이 성공했다고 말하는 순간 반혁명**은 시작된다. 자유당 정치인들은 이승만 몰락 직후에는 생존을 위해 남들보다 앞장서서 헌법 개정을 외치고 자체 내의 이승만에 대한

과잉 충성파의 숙청을 외치지만 혁명의 열기가 수그러들자 혁명을 폄하하고 끈질긴 생존의 길로 나아간다.

10여 년간의 집권을 통해 적어도 국가기관을 장악하고 있었고 여기에 국가기관내의 인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했고 물적인 자원도 충분했으므로 생존의 조건은 자유당이 새로이 등장하는 민주당은 물론이고 혁신세력보다도 훨씬 유리한 것이 사실이었다. 민주당은 여기에 맞서서 5월 이후에 서서히 권력의 공백을 메워가며 물적인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자유당 시절의 부정을 답습할 수밖에 없었다.

그 결과는 7월 29일 민의원과 참의원 선거과정에서 나타났다. 자유당 시절의 인사들이 대거 자유당보다는 무소속 내지, 혹은 혁신세력의 일부로 등장하는 사태까지 나타난다. 반혁명의 분자들이 스스로 혁명의 분자로 거듭나는 현상까지 발생한 것이다. 이들에 대한 유권자들의 인기는 상당한 것이어서, 민중들은 혁명을 각 지역에서 투표를 통해 역전시키는 현상이 발생한다.

선거과정은 전혀 혁명적이지도 않고 그저 자유당 시절의 아류로 돌아가고 있었다. 고무신과 막걸리가 판을 치고 돈봉투가 살포되었다. 각종 연고에 의해 자유당 시절의 풍부한 자금과 연줄을 통해 취업알선을 해주고 마을 사람들에게 도움을 준 이들이 다시 부상했다. 혁명은 그저 대도시 지역을 통해서만 나타났던 것이다. 대도시의 젊은 혁명세력들은 농촌에 몰려가서 반혁명분자들의 국회진출을 막고자 다시 일어나고 결국 7월 29일 선거후에도 이들은 각지에서 진출을 막기 위한 적극적인 투쟁을 하게 된다.

선거는 결국 민주당 인사들이 국가를 장악하게 만들어 주었고 소위 각종 혁신계 인사들의 패배와 제도권 외의 운동으로 전환하게 만들었다. 혁신계 인사들에게는 혁명의 열기를 살리는 운동과 동시에 통일운동으로의 전환이라는 과제를 맞게 된다. 이 두 가지 과제 모두 만만치 않은 것이었다.



"어느 정파를 위한 사월혁명 아니다 국법을 수호하여 피의 보답하라" 라며 시위를 벌이는 4·19 부상자들, 1960년 사진제공 경향신문

사법부는 부정선거의 원흉들에 대해서는 이미 무효가 된 선거를 처벌할 수 없다는 논리로, 그리고 부정부패에 대해서는 증거의 불충분과 검찰의 소극적 대처로 미약한 처벌로 끝내려 했다. 이에 젊은 혁명세력들이 다시 국회에 요구해 간신히 특별법의 형태로 처벌을 이끌어 낸다. 투표와 정치와 사법 처리가 혁명의 장애가 된 것이다. 검찰은 이들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의 논리를 댄다. 이제 정세는 역전되었다. 자유당 정부는 혁명세력에 대해 공산세력의 사주를 받았다고 선전을 했는데 이제는 자유당의 부정선거 원흉들이 역으로 민주주의 체제와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해 국가 보안법 위반의 혐의를 적용받았던 것이다. 국가보안법의 운명은 항상 정권의 요청에 의해

국가와 체제가 규정하는 대로 적용되는 것이 역사인가 보다.

비대해지고 거의 독점적으로 권력을 장악한 민주당 세력은 다시 구파와 신파로 나뉘어서 적대적인 경쟁을 시작한다. 혁명의 열기를 정권과 계파의 권력독점으로 전환시키는 계략을 정치에 도입한다. 1960년 12월과 1961년 3월 사이에 있었던 도와 시와 면에서의 단체장과 의회 의원, 그리고 동장 선거는 직접선거였고, 교육위원 선거는 의회의 간접선거로 치러졌다.

이들 선거는 민주당 구파와 신파의 대결이었다. 구파와 신파는 민주당을 장악한 경력의 장단을 의미하는 것이지, 그것이 함의하고 있는 권력의 기반이나 이데올로기 아니면 시대적 정신의 장단을 구분하는 것은 아니었다. 즉 권력다툼의 한 양상 이상의 의미를 그다지 보여주지 못했다.

이들 세력은 다시 자신들이 잡은 권력을 옹호하기 위해 과거 자유당의 정권 유지 전략을 답습하면서, 정치자금을 모으기 시작하고, 혁신세력의 운동 역량을 약화시키기 위한 2대약법, 즉 반공법과 시위규제법을 통과시키려 노력한다.

다른 한편 대외적으로는 미국의 영향력에 의존해 경제개발을 서두르고, 미국의 전략에 의해 일본과의 외교정상화를 서두르게 된다. 미국의 대한국 전략은 이제 전시국가체제에서 서서히 한국의 자립과 경제발전을 통한 반공거점으로서의 전환을 꾀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 일본과의 국교정상화도 역시 미국의 동북아 개편전략의 일환으로 이해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반면에 미국이 반공보루로서 한반도를 재편하는 과정에서 군부는 적극적으로 미국의 이해를 대변하는 기구로 전환하고 있었다. 군부, 특히 정치군부는 자신들의 표현에 의하면 이미 오래전부터 쿠데타를 꿈꾸고 있었다. 당시의 민주주의는 너무나 취약한 것이었으며 역사적으로 미 군정에 의해 주어진 선물정도에 불과했다. 민중의 자

발성은 지역에 따라 고양의 정도가 달랐고, 일부 민중은 물론이고 신문의 좌담에서조차 무질서를 개탄하고 군부 혁명의 가능성을 논하고 있었다. 심지어는 민주당 구파에 속하는 당시의 윤보선 대통령조차도 무기력하게 군부의 쿠데타에 물러서고 만다.

왜 대중들은 그리고 권력을 이미 독점하고 있던 기존 정치인들은 쉽사리 군부에 정권을 이양했는가? 그토록 희생을 치르고, 고난의 길을 거치면서 주어진 권력을 찬탈당한 것이 아니라, 포기했는가? 대중들은 정치인을 그리고 정치인들은 대중들에게 손을 돌린다. 즉 정치인들의 끊임없는 싸움을, 그리고 대중들의 지나친 욕구 분출을 탓한다. 결국 문제는 한가지이다. 정쟁이 흐르는 제도, 그리고 제도의 정착과 신뢰이다. 이런 제도가 바로 민주주의였다.

민주주의는 적용하는데 각성과 학습을 요한다. 민주주의는 각자의 이해관계의 표현에 관대하고, 소통하고, 그러면서 조절되는 양상을 보인다. 이것이 바로 각성과 학습이다. 이때 중요한 것은 자율성을 존중한다는 점이다. 강제와 불공정과 독점이 사라져야 민주주의는 작동한다. 자율성에 기반한 책임과 권리가 자라난다.

1960년 4월 혁명은 1961년 5월 군사쿠데타에 의해 그렇게 끝났다. 당시 쿠데타 세력들은 자신들은 4월 혁명의 열기를 이어받는다 주장했다. 그 주장이 실현되었는지는 시기별로, 그리고 영역별로, 반면교사의 측면에서 두루 점검해 볼 일이다. 대부분의 평가들은 긴 시간의 관점에서 혁명은 배반당하고, 유린되었다고 주장해 1960년 4월혁명과 박정희 군부정권을 일치시키지 못한다. 보나파르티즘에서 보여주듯이, 자신의 약화된 정당성을 보완하는 차원이건, 아니면 중주국 미국에 기생하는 차원이건, 혁명은 민중의 이해와 일치시키고, 동시에 민족주의에는 배반하고 반

공에 일치시키는 전략으로 나아갈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러면 4월 혁명의 효력은 어디까지 나타났는가? 혹자는 적어도 박정희 초기에 군부가 직접 장악하지 못하고 군복을 벗은 다음에 민간인의 신분으로 정권을 장악한 점, 1963년의 대통령선거, 그리고 1960년대를 어느 정도 풍미했던 정권에 대해 비판을 자유롭게 허용했던 상황을 언급한다.

역사는 정권에 의해 기억될 뿐만 아니라 민중에 의해서도 기억된다. 기억은 한사람의 머리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동료들과 자식들과 이웃들과 만나면서, 과거를 회상하듯 영웅담을 늘어놓듯, 신세를 한탄하듯 역사에의 참여를 과시하듯 전파된다. 아니 전염된다. 듣는 사람은 따분한 듯, 복고적이라고 느끼는데 아니면 그렇게 하면 나만 손해본다고 생각하면서 듣고 배울 것이다.

역사의 기억은 개인의 기억에서 주위에 전파되고, 가끔씩은 역사책을 통해, 기념식을 통해, 형상화된 예술품이나 건축물들을 통해, 이야기와 축제를 통해 공동체의 자부심으로 학습된다. 공동체의 자부심은 개인의 역사와는 별개로 유지되면서 공동체가 위기에 처할 때 발현된다. 공동체의 역사에 한 개인이 참여하는 것은 개인의 결심에 의해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필요성에 개인들이 이끌려 들어가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역사는 공동체의 역사이고, 그 흐름은 개인이 아닌 우리에게 의해 미래로 나아가는 것이다.

오늘도 역사는 감추어져 있다가 오랜 모순과 고통이 응축된 이후에 표면에 드러나는 것이다. 모순과 고통의 응축은 개인들의 경험이 모여서, 공동체적인 해결을 요구할 때 발현되는 것이다.

글 이은진 | 경남대 사회학과 교수